



문서번호 : 25-11-민생위-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 과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 입법 미루지 말라!

전송일자 : 2025. 11. 3.(월)

전송매수 : 총 9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정의연대,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 보도자료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 과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 입법 미루지 말라!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시민단체,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지도부에 면담요청서 전달

일시·장소 : 2025. 11. 3.(월) 10:00, 국회 정문 앞

1. 오늘(11/3)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5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경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을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시계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논의에만 멈춰있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민생의 땀과 눈물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유통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은 막강해지고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 매출 3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도로 민주당, 도로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실망과 조롱을 피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배달앱 총수수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취약한 채권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인구 절반이 사는 비수도권 거주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개인금융 채무 조정 과정에서조차 사기를 당하는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차주를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추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효완성 채무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을들의 협상권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발언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본사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해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결함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피해자의 효율적 규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끝.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불임2: 기자회견문

■ 불임3 :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 과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 입법 미루지 말라!
- 일시 장소 : 2025.11.03 (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1.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발언2.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3.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
 - 발언4. 유흥상권 보장 및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 :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면담 요청서 전달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짜 민생’ 입법 처리하라

12.3 내란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후, 첫 정기국회가 열렸다. 지난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AI 산업 중심 기업 투자 강화와 같은 ‘허울 좋은’ 내용만 다루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경기 악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낭떠러지에서 버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민생 앞에서 다짐했던 과제들을 미뤄선 안 된다.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민생 국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쿠팡,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마음대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빅데이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영업매출의 30% 가까이 수수료를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최혜대우요구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을 위협하는 것은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권력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보장하는 골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어 600만 자영업자를 좌절시켰다. 국회는 이번에는말로 자영업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갑을관계 협상권 강화, 가맹·대리점주들의 계약 갱신권 보장,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입법을 방치하는 동안 소득격차 양극화는 더욱 벌어졌다. 자영업자 부채는 올해 2분기 1064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무불이행자는 10만명으로 급증했는데, 대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무임금으로 장사하는 가족 자영업 종사자들도 허다하다. 이들의 부채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따위의 차원이 아니다.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져 임대료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대출을 받거나, 고금리로 원금을 뛰어넘어버린 이자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불법 사금융과 폭력적인 채권 추심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채무취약자를 보호할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대규모 이통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SKT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 기업은 문제를 축소, 은폐할 뿐 적극적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팸, 취업사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허다하며, 이를 절박한 시민들에게 더욱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개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보상 방안을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떠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독점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라

하나, 외식물가 폭등시키고 자영업자 옥죄는 배달앱 수수료를 규율하기 위한 배달앱 총수수료상하제를 도입하라

하나,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하나, 불법·폭력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개정하라

하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거대 여당은 지금까지 민생 앞에서 약속한 민생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야당은 내란사태로 불거진 경제 악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민생입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경제를 뒷전으로 미뤄선 안된다.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평가하고, 유권자로서 판단할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붙임3 : 발언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난 9월 1일, 제22대 국회의 정기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단순한 입법 회기가 아닙니다. 위헌적 계엄 시도와 내란 위기를 딛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국회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시계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논의에만 멈춰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민생의 땀과 눈물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와중에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입점 수수료, 광고비, 배달 중개 수수료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지만, 상인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통기업으로서 시장의 지배력을 무기로 유통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의 이름을 단 PB상품이나 오프라인 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사실상 명분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수익의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거래 관계를 바로잡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입니다. 이 법은 플랫폼의 독과점과 갑질을 막고,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 업체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민생의 회복과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만큼 국회는 여기에 반드시 답해주길 바랍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오늘 이 자리에 선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수년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정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현장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전국 곳곳의 점주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가게 문을 닫은 이들은 빚을 남긴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폐업률이라는 통계는 결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자, 지금 당장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절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장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수수료 구조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매출의 3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광고비, 결제수수료, 중개수수료, 배달료까지 얹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본사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점주는 일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시장이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합니까?

정부는 이제 ‘시장 자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나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늦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관세 협상’을 이유로 미뤄온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행히 여야 모두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또한 ‘배달플랫폼 갑질방지법’을 통해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모두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고통 앞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거짓입니다.

‘도로 민주당, 도로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실망과 조롱을 피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이며,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가게 불을 켜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

계엄 정권 끌어내리고 내란 진압하느라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전히 내란 진압 중이지만 처리해야 할 민생은 산적합니다. 대출 이자는 휴일도 없이 채무자 숨통을 조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기와 부동산 부양 목적으로 때로는 복지 차원에서 대출을 확대해 시중에 돈을 풀 인플레이션 대가로 평범한 시민들이 돈을 빌려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고물가, 고금리 대가로 갚을 돈도 일자리도 없는 이들은 이자를 상환하려 고리의 대부업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덧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인권과 제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오랜 채무에 대해서는 숨통이 조금씩 트인 것 같지만, 채무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은 발의만 된 채 2025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를 안타깝게 그리고 절박하게 바라보며 2천만 채무자를 대신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국회에 촉구합니다.

1. 인구의 절반이 사는 비수도권 거주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는 물론 개인금융 채무의 조정 방법을 알아보다 사기를 당하고 채무 정리는커녕 빚만 늘어난 채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주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도 채무자 대리를 하여 채무자 인권을 보호하도록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2.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개인 또는 법인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촉구하며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도록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3. 불법추심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차주의 인식이 강화되었지만, 시효완성 채권을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창민 의원 발의 법안대로 시효완성 채무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포괄면책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금지하도록 반드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4. 이상휘 의원과 이현승 의원 법안 발의로 개인이 좀 더 인간다운 금융 시장과 환경에서 채무자들이 능력껏 조정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추심법 개선을 위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채무자들은 빚을 100% 탕감받길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환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조정받아 나눠 상환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

오늘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이 반복되어도 바꿀 힘이 약자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생계와 권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일방적으로 바꾼 광고비나 물류비를 감내해야 하고, 대리점주는 납품단가 인하를 통보받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제기하지 못한 채 협상 없이 과도한 유통 마진을 떠안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결함으로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개별 소송의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증권 분야에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법으로는 일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를 조장합니다.

이러한 을의 협상권 미보장과 집단소송제 미도입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 폐업 사태와 같이 사회 전체의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약자의 언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을협상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해 본사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거부 시 제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대리점법 개정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거래조건 협상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확대하여 다수의 소액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가능케 하며, 소급 적용을 통해 과거 피해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을이 협상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민생 입법'입니다. 협상권이 사전예방장치라면, 집단소송제는 사후회복장치입니다. 이 두 제도가 함께 있어야 시장은 비로소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민생 입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정기국회 내에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논의만 반복되고, 회기만 넘기는 동안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다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행동할 때입니다. 불공정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협상할 권리와 함께 싸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